
서평

어둠 속에서 길찾기

—백낙청, 『어디가 중도이며 어찌서 변혁인가』

최장집, 『민중에서 시민으로-한국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백낙청, 『어디가 중도이며 어째서 변혁인가』, 창비, 2009
 최장집, 『민중에서 시민으로-한국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돌베개, 2009

김정훈

1. 어른, 그리고 지식인

흔히들 우리 사회에는 어른이 없다고 한다. 이미 고령화된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말은 생물학적 어른이 없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나이가 만든 경험이 지혜로 승화되어 그 사회의 나이갈 바를 밝혀주는 나이드신 분이 없다는 말일게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는 어른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어른은 적은 반면 사실 퇴물들이 너무나 많다. 경험이 지혜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되어 변화하는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잡아끄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사회가 우리 사회고,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 것 같다.

어른이 있는 사회는 분명 좋은 사회일 것이다. ‘권력에 대한 예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노욕에 가득 차 황당한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준엄히 꾸짖어 주고, 너무 과하지도 적지도 않게 ‘상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다면 그나마 이 사회는 조금의 희망

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진 어른을 만나기도 힘들지만, 그런 ‘지식인’을 만나기는 더욱 힘들다. 지식인이 그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해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문제와 직접 대결해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식인을 만나기 역시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문의 도착성이 아주 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관념으로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개념을 만들어내는 지식인을 찾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백낙청 선생과 최장집 선생을 만나는 것은 즐겁고 유익한 일이다. 비록 글을 통해 뵈 수밖에 없지만, 항상 ‘권력에 대한 예의’보다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젊은이들도 따라가기 힘든 작업량을 통해 언제나 지금 여기의 문제에 친착하려 했던 분들이라는 점에서, 한 시대의 어른이며 지식인을 뵈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책을 내셨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를 어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묵묵히 지나치기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이 그분들을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였나 보다. 남북관계, 민주주의, 서민경제 모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소위 3대 위기의 시기에 이분들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목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울리는 두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시대를 성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백낙청 선생의 『어디가 중도이며 어째서 변혁인가』와 최장집 선생의 『민중에서 시민으로—한국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을 논하는 글이다. 이 짧은 글에 책 두 권을 평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이기는 하지만 이럴 때는 어른의 지혜보다는 어린 사람의 무모함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부터는 존칭은 생략하고 보다 본격적으로 두 저자의 주장에 접근해 보자.

2. 중도적 변혁주의

인문학자로서의 백낙청이 아니라 사회과학자로서 그리고 실천가로서의 백낙청의 최대의 업적은 ‘분단체제론’의 발명과 그것의 일관된 추구라 할 수 있다. 분단체제론 이후 지속된 백낙청의 작업은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실천전략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해석하는 유력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백낙청의 새 책은 그가 최근에 쓴 글을 묶은 것으로 그의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현실이 그려져 있다. 백낙청에게 한반도의 현실은 53년도에 형성된 분단체제의 연장선에 있다. 남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남한만의 관점이 아니라 전한반도적 관점, 즉 분단체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분단체제론에 입각하면 현재의 한반도는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일시적으로 재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분단체제의 해체의 길로 가고 있다고 파악된다.

분단체제가 해체되고 있다는 주장의 현실적인 근거는 6·15공동선언이다. 백낙청이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은 무력통일도, 흡수통일도 불가능한 합의에 의한 통일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6·15공동선언이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서문에서 책 내용이 중복적이라고 할 만큼 6·15공동선언의 획기성을 강조하고, 특히 그 2항을 강조하고 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로 이루어진 이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남북한의 통일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평화적일 뿐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함을 남북한이 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항이 중요한 것은 이 항목이 바로 한반도식 통일의 특징, 즉 ‘시민참여형 통일’의 길을 놓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듯 보이지만 분단체제는 해체

중이고, 한반도의 통일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분단체제의 변혁을 꿈꾸지는 않더라도 흔들리는 분단체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관리하기는커녕 과거로 돌아가려는 수구세력도 문제지만, 역으로 외세의 문제만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후천적 분단인식결핍증후군’으로 불릴 만큼 남한만의 발전을 꿈꾸는 진보세력 역시 분단체제의 해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관점은 ‘변혁적 중도주의’이다. 그가 볼 때 변혁적 중도주의의 변혁대상은 한반도의 분단체제이다. 그리고 이 분단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분단현실을 고수하려는 이들과 비현실적인 과격노선을 고집하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힘을 합치는 광범위한 국민통합(321쪽)’이 요구되는 바 이런 관점이 ‘변혁적 중도주의’라 할 수 있다.

백낙청은 나아가 변혁적 중도주의의 현실적 세력을 발견한다. 그것은 각성된 지식인과 자발적 군중이다. 그것은 이념적으로는 성찰하는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만남이고, 현실적으로는 2008년의 촛불군중과 2009년의 노무현을 애도한 대중들이다. 아직은 추상적이지만, 변혁적 중도주의가 보다 확실한 내용과 모양새를 갖출 때 분단체제의 해체가 보다 빨리 오리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3. 민중에서 시민으로

정치학자 최장집의 주장은 일관되어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정당체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책 역시 그의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평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서문의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그의 주장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한 주제, 그

리하여 그가 작심하고 이야기한 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먼저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당체제의 부재이고, 다음으로는 이 책의 제목인 '민중에서 시민으로'가 보여주듯이 정당의 기초인 '계급'의 부재이다. 이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정부는 양극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지지기반을 해체했고, 민주주의의 토대의 상실은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그는 이 책에서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볼 때 '좋은 정당'의 부재를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정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가 1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갈등을 부정하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지만, 그가 보기에 민주주의는 갈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정당을 통해 갈등이 조직화될 때 갈등은 한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가 시민사회의 문제, 운동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광주항쟁 및 이명박 정부의 평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관철된다. 그가 볼 때 진보파의 실패는 그리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진보파가 정치의 문제, 즉 정당민주주의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보파가 강력한 국가와 사적 이익집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정당으로 조직하지 못해 국가의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민주화의 핵심세력이었던 운동권이 도덕주의, 낭만주의, 국가주의로 인해 반정치·반정당적 민주주의관을 갖게 되어 투입중심이 아니라 산출중심의 정치개혁을 이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민주파를 자임하는 세력들이 국민들의 개혁요구를 정당과 정책으로 조직하고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좋은 정당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그의 정당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의 기반인 '시민'의 재구성으로 옮겨간다. 그가 보기에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에

서 갈등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이후 무시되었던 ‘시민’을 되살려야 한다. 그런데 되살려야 할 시민은 단순히 정치적 권리만을 가진 반쪽 시민이 아니라 ‘사회적 시민권’을 가진 완전한 시민이다. 그가 보기에 1987년 이후 민주파들이 몰랐던 것은 ‘보편적 시민권에 입각한 민주주의’이고,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이 책의 제목이 왜 ‘민중에서 시민으로’ 인가를 알 수 있다. 그는 민주화 시대의 주체가 계급적 주체에서 정치적 주체로 이동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민권 개념을 통해 사실상 민중 개념을 복권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정치적 주체이며 사회적 시민권의 담지자였던 ‘민중’이 민주화 이후 정치적 권리는 어느 정도 획득했지만 사회경제적 권리는 오히려 약해졌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사회적 시민권이 부재한 사회이다. 그가 ‘민중에서 시민으로’라는 제목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시민권은 시혜가 아니라 절차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4. 미로 속에서 길찾기

두 저자의 책을 읽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른이며 지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낀다. 최장집이 정치개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때, 대중의 열광을 거스를 줄 아는 지식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무릎을 탁 치기도 하고, 백낙청의 인문학적 지식과 사회과학적 논리를 넘나드는 혜안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일관된 열정과 논리에 찬탄을 마지할 수 없다. 쉽없이 책장을 넘기게 만드는 힘이야말로 이 두 책의 문제의식과 주장에 기인한 것이리라.

그러나 시절이 너무 하 수상한 때문인지, 두 저자의 논조가 더욱 명쾌해지는 만큼 단순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더구나 시간을 두고 읽었다라면 훨씬 풍부하게 읽을 수 있을 책을 연달아 읽다 보니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

다. ‘분단환원론’ 혹은 ‘후천성 분단인식결핍 증후군’을 두 책에서 번갈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만의 편견인가?

나의 이런 독해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먼저 백낙청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너무 일면적이다. 과연 소위 민주정부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기만 한 것일까? 오히려 6·15공동선언,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낳은 탈분단의 효과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닐까? 최장집의 바람처럼 한국의 보수/진보의 세력관계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갈등하기보다는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역으로 분단체제가 한국 정치에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최장집이 6·15공동선언이 낳은 탈분단의 효과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DJ에 의한 탈분단의 효과는 우리 정치의 문제인 냉전반공주의를 해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으며, 그로 인해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민주정부 시기 동안 양극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토대가 한편에서 무너진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탈분단으로 인해 냉전반공의식으로 부터 해방된 새로운 국민이 형성된 것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중요한 현상이 아닐까?

다음으로 최장집의 관점에서 보자면, 백낙청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역시 일면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87년 체제’라는 개념의 적합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87년 체제를 53년 체제의 하위범주로 제시하고, ‘6·15시대’의 획기성을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이 낳은 탈분단의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상당히 과대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 백낙청도 지적하고 있듯이 분단체제는 남북한의 분단세력에 의해 재생산되는 것이고, 남 혹은 북의 분단세력은 각 사회에서의 세력관계에 의해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한반도적 관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남한 내부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나는 6·15공동선언이 낳은 탈분단의 효과를 DJ 효과라 부른다. DJ 효과는 무엇보다 1987년 민주화에 근거한 민주화의 효과이다. 민주화가 없었다면 백낙청이 주장하듯 ‘분단체제가 동요된’ 87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2000년의 획기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인정하듯이 한국 사회는 분단/탈분단, 민주/반민주, 자본/노동의 균열을 갖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각 균열의 일면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로 나가자는 것도 환원론이지만, 특정 균열만을 강조하는 것도 환원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환원론 중 요즘 주목을 받는 것이 97년 체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환원론이다. 나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고통받는 교육문제와 주택문제가 신자유주의로 환원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한국의 학벌사회가 과연 신자유주의의 때문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런 면에서 안타까운 점은 정치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던 최장집의 글이 점차 97년 체제론자들을 닮아간다는 점이다. 과연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퇴조하기만 한 것일까? 한국의 시민사회는 탈동원화만 된 것일까? 내가 보기에 한국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퇴보되었지만, 시민사회의 시민들은 상당히 민주화, 합리화되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촛불시위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최장집의 주장처럼 그들의 주장을 조직화할 정당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역량은 과거보다 훨씬 커진 것은 아닐까?

동일한 질문이 백낙청에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백낙청의 주장처럼 결국 한국의 통일이 ‘시민주도형 통일’ 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은 보다 탈분단적인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최장집의 주장대로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당을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한다. 최근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의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는

다면 분단체제는 현상태에서 장기간 고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이익의 다원화와 정체성의 다원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 및 정체성의 다원화는 과거와 달리 계급, 민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70년대식 민중개념,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피억압자라는 개념이 다원화된 사회에는 더 어울릴지 모른다. 혹은 이러한 다원화를 포착하기 위해 급진민주주의자들의 개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단일변인으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들에게 한국 사회라는 미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화, 정보화, 신자유주의, 탈근대적 가치 등등의 다양한 현상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 갈등은 민주주의 혹은 분단으로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이런 갈등은 최장집의 말처럼 더 이상 운동이 아니라 정당을 통해 조직화되어야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은 이러한 복합적 갈등의 정체를 해명하는 일일 것이다. 복합적 갈등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정당을 통한 조직화가 가능하고, 탈분단의 주체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내적 비판을 위하여

이제까지 아주 간략하게 두 책의 핵심주장을 요약하고 비판도 해 보았다. 아주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두 책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제대로 정리했는지도 걸리는 일이다. 글 읽기라는 것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주제넘음도 어느 정도는 용서될 수 있는 일이라 믿는다.

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열린 글읽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민족주의’에 관한 것이다. 백낙청에게 규범적 민족주의의 경향이, 최장집에게 탈민족주의적 경향이 비치기는 하지만 내가 논하려는 것은 저자들의 경향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주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는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 라는 앤더슨의 정의를 받아들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상’ 이 흔히 오해되듯이 허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상상이 물질적 토대를 가질 때 그것은 현실이 되고, 그래서 민족을 위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민족이 물질적 토대를 가진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허구라 생각한다고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족은 상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관점이 보다 유익해 보인다. 그러면 중요해지는 것이 ‘누가’, ‘무엇을’ 상상하는가 하는 것이다. 시민권의 발전이 민족주의의 평등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마샬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보편적 시민권이 잘 보장된 북구의 나라들이 가장 많은 해외 원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상상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민족주의론에 빗대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상의 내용이 아니라 상상의 주체이다. 최근의 민족주의 논쟁에서도, 보다 폭을 넓혀 다양한 사회과학적 논쟁에서도 항상 빠져 있는 것이 주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문제에 있어 양 저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양 저자는 ‘변혁적 중도주의’, ‘좋은 정당체제’ 라는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물론 양 저자의 주체는 ‘시민’ 이다. 그리고 이 시민이 ‘보편적 시민권을 가진 시민’ 이라는 점 역시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상상의 내용’ 이지 상상의 ‘주체’ 가 아니라는 점이다.

백낙청, 최장집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많은 정책과 전략을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진보가 정책과 전략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나는 부정한다. 사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안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상상의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누가 상상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의 사상이 위대한 점은 그가 내적 비판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내적 비판의 계기' 즉 노동자 계급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현실에서는 무엇인가? 노동자계급인가? 민족인가? 아니면 연대인가? 그러면 연대의 현실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하지 않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 것 같다. 이익과 정체성이 고도로 복잡하게 얽힌 지금 한국 사회에는 사회를 변화시킬 내적 계기 혹은 세력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어른들이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어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상상의 주체'를 찾아내는 일이 아닌가 싶다.